

전남도 SOC 국가계획 반영 ‘힘겨운 싸움’

전라선고속철·무안공항 활주로 연장·흑산공항 등 신규사업 건의
정부는 경제성 앞세우고 지역 공직자 인적 네트워크 와해로 난항

전남도가 낙후된 기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부처 계획이나 내년 예산에 신규 사업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들이 여전히 경제성, 수요만을 앞세우고 있는데다 최근 지역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와해되면서 실제 반영까지는 힘겨운 과정의 연속이다.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부처 내 기류에는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호남선 복선화에 90년이 소요된 것처럼 고흥-완도 국도 승격은 30년, 흑산공항 조성사업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는 등 특단의 대책없이 과거 정부의 논리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사업비 4조7957억원), 서해안고속철도(군산~목포 2조3056억원),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4조850억원), 광역철도(광주~나주 1조3692억원, 광주~화순 5225억원) 등을 건의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양항~울진산단 간 연결도로 개설(2024~2030 6542억원), 3단계 투기장 전면 항로 준설(2021~2024 676억원), 여천 항로 확장(2022~2025 1399억원), 울진2산단 석유화학 부두 건설(2021~2024 710억원), 향남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2022~2026 5490억원) 등의 사업의 신규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위상 정립을 위해 2023년까지 활주로 연장, 여객청사 리모델링 등에 각각 354억원, 408억원을 투입한 뒤 고속철

도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연계망을 구축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다. 흑산공항은 신안군이 5.32km의 갯벌을 국립공원 대체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아직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발전을 위해 무역, 교류, 관광 등에 필요한 무안국제공항, 흑산공항, 광양항, 철도망,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하지만, 전남은 정부부처의 우선순위에선 뒤처지며 매년 같은 사안을 들고 정부부처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기업 등이 없어 정부부처가 강조하는 수요, 경제성 등이 미흡한데다 지역 출신 고위공직자들마저 거의 사라져 ‘기밀 언덕’조차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고안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도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우선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정, 정부부처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부처에 ‘읍소’하는 것은 갈수록 한계가 있는데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 역시 나오기 어려운 여건에서 불균형만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갈수록 인구, 경제규모를 갖춘 지역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20명 농지
수사결과 따라 강제처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전면적인 LH 혁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봄이 왔어요”... 광주 충장로에 인파 ‘복적’ 14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가 휴일을 맞아 거리로 나선 시민들로 복적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도심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거리두기 1.5단계 28일까지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대로

코로나19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 연장한다. <관련기사 2면>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지속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시도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예외 사항은 확대됐다. 기존 예외 사항인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대비해 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과 함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도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광주시 등 비수도권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유흥 시설과 성인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으며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방역 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일상생활의 제약이 완화된 만큼 더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지난 8일 일일 확진자 발생이 33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9일 1명, 10일 1명, 11일 2명, 12일 3명, 13일 1명, 14일 오후 2시 현재 0명 등으로 진정된 모습이다. 전남은 이날 들어 신규 확진자가 줄곧 한 자릿수(0~7명)를 유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미안마 연대’ 릴레이 시 게재 ▶2·16면

텍사스 양현중, 2019년 3K 무실점 ‘쾌투’ ▶18면



문화를 품은 건축물 열전 - 이응노 미술관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떨감처럼 다 태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버린 담배꽂초와
무분별한 취사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 ☒ 성냥, 라이터는 두고가고!
- ☒ 취사대신 도시락을 즐기!
- ☒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